

제1주제 – 세계화시대 한국인의 심성 : 지형(地形), 역사(歷史), 성정(性情)

2016년 9월 29일(오픈특강)

주제발표 | 송호근 (서울대학교 교수)

초청토론 | 김성수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요지

한국의 지형과 한국인의 성정 : 한국인에게서는 한국인만의 기질이 있고 그것은 집단적 기질로 발현되는데, 이를 주변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한반도가 살기에 적합하고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을 안고 산다. 일본인의 기질에는 공포심과 고립감이 내재되어 있다. 공포심은 섬나라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고립감은 중화문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형에서 비롯된 향토성에서 비롯된 감성은 우리에게 깊이 배어 있다. 1930년대만 해도 우리글이 정립이 되지 않았고, 1960년대가 되어야 철자법이 정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용은 유리알 같은 시를 썼다. 정지용의 대표적인 작품은 “향수”(1927)이다. 이 시가 그리는 곳은 정지용의 고향인 옥천이다. “전설바다의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사철 밭 벗은 아내와” 같은 구절은 기가 막히는

표현이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순천을 담았다. 이문구의 소설은 충청도 사투리로 서술되어 있어 충청도의 향토성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만주에 살았던 윤동주의 시는 그의 고향을 그리고 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는 곳이 바로 윤동주의 고향이다. 그곳에 살면서 청년 윤동주의 가슴에 시가 맺힌 것이다. 결국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지형이 보내준 언어이다. 박경리의 『토지』는 고향인 통영을 담고 있다. 나는 박경리 선생 생전에 『토지』의 모티브가 무엇인지 물어 본 적이 있다. 그분의 대답은 “지형”이었다. 문인의 어린 시절에 본 지형의 장면들이 문인에게 영감을 준 것이다. 통영에서 태어나서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1944년에 중매결혼을 하였고, 6.25 한국전쟁에 남편이 참전 후 연락이 두절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속초로 갔다. 2009년에 다시 고향 통영으로 돌아와 얼마 후 돌아가셨다. 결국 자신의 정신적 고향으로 돌아오는 궤적이 평생 『토지』를 쓰시게 한 것이다. 『토지』5권에는 초기 주인공의 2세대들이 통영으로 하나둘 모이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출발했던 곳으로 회귀함을 내포한다. 고향은 정신의 원형이 형성된 곳

이다. 박경리 선생에게 통영의 서호시장은 창작의 불꽃을 지피는 불씨이다. 박경리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쓴 추모시에도 그런 통영의 향토정서를 담고자 했다.

한국의 지리와 한국인의 성정 : 기질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정(性情)이다. 한국의 지리적 특성도 한국인의 기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만 여 년 전에 인간은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해를 뜨는 동쪽을 향해 이동했을 것이고 추우니까 남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므로, 결국 그들이 향한 곳은 한반도 쪽이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경쟁밀도가 높기 때문에 승부 근성이 강하며, 타협할 줄 모르는 DNA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어디나 관광지이다. 중국의 산천과 한국의 산천은 다르다. 중국에 비해 스케일은 작지만 개울에 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섬세한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용력이 있고 지능이 높은 편이다. 인종이 많기 때문이다.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1905년에 신재호 선생께서 만들어낸 용어다.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의 계통이 같다는 일본의 주장에 반발하여 “민족”과 “겨레”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지리적 위치로 인해 다인종 사회라는 점은 다양한 민족의 얼굴이 아직까지 한국인의 얼굴에 남아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의 인종 박물관이라 할 만 하다. 우리나라는 땅이 작다 보니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협소한 평야에서 농사를 지어 5천만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쌀을 생산하는데 수급조절이 필요할 정도로 억척스럽고 근면성실하다. 골프 여전사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의 기질을 확인할 수 있다.

통치구조, 지정학적/지경학적 특성과 한국인의 성정 : 그런데 왜 한국사람들에게 주변성, 경계성(警戒性), 배타성이 형성됐을까? 이러한 성정이 형성된 것은 통치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15%를 차지할 정도로 개방적인 사회였다.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는 조선이 개국되면서 폐쇄적으로 바뀌었다. 싱가포르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물류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부를

축적한 나라다. 생존을 위해 개방적인 사회가 된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경 내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 역시 국내 자본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인천 송도는 공공성을 이유로 외국자본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물류의 중심지로 구축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지만, 순종주의가 이를 가로 막고 있어 경제특구를 만들기 어렵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그들의 2세대를 우리의 후손으로 같이 키워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가 도래 하였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위치와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인의 기질에는 배제(Exclusion), 방어(Defense), 폐쇄(Closedness)가 내재되어 있다. 프랑스 학자인 Jaque Attali는 한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족제도(순혈주의)와 가족 내 여성의 해방, 교육제도, 이민제도를 더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우리 사회의 서열주의도 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성리학 질서의 통치구조, 중화문명으로 인해 반주변성을 띤다. 조선이 3만여 명 정도의 군대와 치안병력으로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성리학을 통해 인민의 머리를 다스렸기 때문이다. 조선의 통치 기본질서는 성리학이었고, 성리학의 핵심은 ‘천(하늘)’이었다. 하늘의 관념론적 철학인 천명(天命)과 천리(天理)는 사대부와 같이 성리학을 배운 사람만이 알았기에, 그 아래 농상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였다. 머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지식국가를 뜻한다. 성리학을 만들어낸 중국은 스스로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는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나머지 국가들은 주변국이다. 중국은 우리를 동이(동쪽의 오랑캐)라고 불렀지만, 귀한 존재로 인식했고 일본, 버마와 같은 완전 ‘주변국’이 아닌 ‘반주변국’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반주변국으로 보았던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잦은 침입으로 200년 이상을 지속한 왕조가 없을 정도였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편입시키지 못한 이유는 조선의 학문과 조공체제 때문이다.

조선에 제국주의 열강의 배가 도달하기에는 너무 먼 곳이었다. 19세기 초반부터 남쪽과 서쪽 해안에 서구의 이익선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1668년 네덜란드의 하멜

은 조선에서의 경험을 하멜표류기로 기록했다. 1816년에는 영국 군함인 엘세스터(Alceste)호가 측량하기 위해 조선의 고군산도에 상륙하려고 하였다. 이 때 현감이 상륙을 불허하였는데, 외국인의 발이 조선의 땅에 닿는 순간 조선이 더럽혀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876년 2월 말, 강화도조약을 맺게 된 이유는 외교문서 전달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다. 결국 일본의 흑선 7척이 강화도에 출몰하였고, 대포 50대를 쏘면서 기병 500명이 몰려왔다. 신헌은 강화도조약을 그나마 평등하게 고치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강화도조약 소식을 들은 전국의 유림들이 분개하였고, 심성론(心性論)과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수양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때, 최익헌은 지부상소(持斧上訴)를 올렸다. 위정척사(爲政斥邪)사상은 조선의 경계적 인식을 나타낸다. 한편, 유길준은 유럽 순방(1885~1889)을 통해 세상의 중심이 해체되고 천지의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이치를 깨닫고 조선의 국권을 주장하였다. 이는 과거 교린(交)질서의 해체를 의미하고, 만국공법(萬國公法), 양절체제, 자유와 통의를 강조하며 “보편의 바다(Globality)”를 지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길준이 주장했던 동등한 국가(주변성 탈피), 공존, 공생의 지평(경계적 인식 탈피), 시민사회의 자율성(배타성 탈피) 대신 일제의 강점으로 탈각에 실패하면서 일제 강점의 유산인 신정적(神政的) 천황제와 방어진 민족주의가 우리 사회에 남게 되었다. 일제 강점, 한국 전쟁, 산업화의 유산은 우리나라를 고립된 섬으로 남겨놓았다.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한 협소한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보수적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생산하는 원소(元素)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인의 성정(性情)에는 주변성, 경계성, 폐쇄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국방 및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서 시민으로 : 한국인이 자율성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민사회가 제대로 발육되지 못하였다. 영화 <국제시장>은 ‘국민의 시대’를

보여준다.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은 수직적 개념인 반면, 시민은 수평적 개념이다. 성리학적 질서에서 오랫동안 백성으로 지내오면서 근대국가에서도 국민으로 살아온 한국인은 국가를 상위의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에서 이준석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은 자신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구조 인력, 즉 국가가 도착했으니 본인의 임무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자 선장은 탈출하려는 승무원에게 “Be British(영국인으로 행동하라)”라고 외쳤다. 승무원들이 1,700여명의 선객들을 탈출시켰을 때, 선장은 마지막으로 “당신들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각자의 생명을 구하라.”고 했다. 한국인은 아직도 국민의식이 투철하며 점차 시민이 되어가는 중이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제 우리들은 “Be Korean”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양시민과 경제시민이 공생,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가교국가(Bridging State)로서의 한국과 한국인의 심성:

한국은 외부로는 가교국가(Bridging State)를 지향하여야 한다. 가교국가란 양대 블록에 속하면서 충돌의 여감을 완화하는 국가를 뜻한다. 한국이 엇갈린 분절에 갇힌 나라이지만, 그러한 조건은 양쪽 블록을 움직일 자율적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은 일종의 기회이자 행운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대륙을 잡고 흔드는 “도끼자루형”이라고 해석될 정도로 큰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내부로는 제도개혁(social redesign), 시민성 고취라는 사회재설계를 통해 공생의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국제시세(Global Situation)를 파악하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여 대륙철학과 해양철학의 융합(Bridging Attraction)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시대 한국인의 심성은 한국의 정통성보다는 통로 역할(network), 호혜정신(reciprocity), 공존(coexistence)을 지향하여야 한다.

종합토론

국가의 국민과 세계의 시민 : 이형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33기)는 때로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국가 자체

가 국민에게 폭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 자체의 존립 문제 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대응해야 할 문제도 생겨나고 있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 앞으로 국가·국민의 개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개념인지 혹은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송호근 교수**는 이 문제는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고민해왔으며, 식민 시대의 지성사를 보면 국가를 구축해야겠다는 의식이 앞서 있었고 절감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인민의 탄생』, 『시민의 탄생』에 이어 『국민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 패러다임이 뒤로 물러날 때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고 애국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예전에 안재홍 선생이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충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한 내용을 소개했다. 민족주의, 세계주의는 애국심에서 출발하며, 국가를 향한 수직적인 애국심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유럽의 국가들이 제2차 대전 이후에 국가의 폭력성을 잠재우고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내내 시민으로서의 교양이 무엇인지 고민한 100년의 역사를 지냈기 때문인데, 그것은 “**더불어 사는 시민**”이라는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에 갔을 때, 한 시민에게 “세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본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직장인 중 한사람으로서 증세에 찬성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킨다는 전제 하에 찬성한다”고 대답하였다고 소개했다. 국가 주도의 시대는 끝났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적이어서 시민에게 자율성을 준 적이 거의 없다고 보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 패러다임 안에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잘 보이지 않았고, 시민정신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애국심과 공생은 씨실과 날실처럼 같이 가는 것인데, 아직 우리 사회의 애국심은 한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다고 진단하고, 유럽 지역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함에 불구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와 비교했다.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 (33기)는 개발의 시대를 지나고 도시재생, 있는 집 고쳐쓰기 외에도 청년 일자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생 등 다양한 개념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시민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기보다 아직도 동원의 개념에 가깝게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의 도시 트렌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향하는 협치주의가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송호근 교수**는 자본주의의 폐단을 보완할 수 있는 변화이며 시민성을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연설할 때 Dear American citizens라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한다. 그 동안 시민은 특정지역의 구성원을 일컫는 용어로 생각하였지만, 이제 시민은 보편적인 용어다. 민주주의로의 발전은 시민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것이다. 프랑수아 토크빌(Tocqueville)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책에서, 저자는 미국에서 권력이 보이지 않았고, 권력은 촌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미국의 중앙 권력은 통치를 하지만 개별 행정단위를 간섭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이다. 관료주의가 수백 년 동안 지속되는 나라가 시민 주도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유럽 사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독일은 1956년에 시민교육 제도를 채택해서 유급 휴가를 주고 10일 동안 희망 국가시민교육청에서 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경험한다. 우리나라 밀양 송전탑의 경우 특정 시민단체가 특정 주민과 결합하면서 보편적 이해관계(general interest)가 아닌, 특정 이해관계(particular interest)를 형성한다. 「김영란법」 시행 시 12조원의 소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파장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을 포함해서 법률을 제정할 때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이다. 법 집행 이전에 비용과 희생을 최소한으로 할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민의식과 단체의식 :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 (33기)는 우리나라는 시민 의식보다 단체 의식이 더 우세

한 것 같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 예로 공기업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공기업과 공직 사회의 거부 반응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대치되면서 지방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에 대한 시각에 대해 질의하였다. **송호근 교수**는 국가의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사 간 합의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반면, 외국의 경우 국가는 시민의 한 조직으로서 참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책대로 시행하겠다는 강압성을 보인다. 강제적인 사회적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다. 노사 타협은 먼저 노(勞)의 “임금 양보”이다. 그러면 사(使)가 양보한 노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임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복지라는 사회적 임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며 출발은 임금 양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노사 협의 과정에서 청년 고용문제가 사라진 일과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했어도 정규직 직원들이 임금 인상과 복지 향상을 주장하는 일은 우리사회에 공존개념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생, 계급 타협이 없다. 성과연봉제는 도입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정부의 역할이다. 증세라는 것은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그 등식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민사회 가치의 구현 : 김용준 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33기)은 호혜와 공존 등 지향해야 할 시민의 가치가 어떻게 사회에서 발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송호근 교수**는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접촉”을 권장한다고 소개하고 주민 활동 등 시민단체의 멤버십을 여러 개 가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며, 시민 참여 없으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주창단체라고 보았다. 영국의 경우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시민은 80%, 학생은 70%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독일 메르켈 총리가 “우린 원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충분한 논의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태 연료를 원한다

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비용 문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몇 해 전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삽을 들고 나온 주민들이 없었고 얼마 후 주민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국가가 보상하라고 주장했던 점을 들어 국가와 시민이 협력하고 책임을 나눌 때 시민사회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